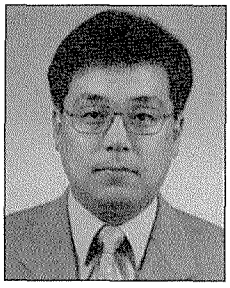

석유산업 정책방향 제언

김 희 선
<LG-Caltex정유 업무팀장>

일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애가 아빠 회사는 좋은 회사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도 커서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좋은 회사라고 답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정유업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론을 시작해볼까 한다.

최근의 석유산업 상황을 보면 복수상표표시제도 시행, 미국 테러사건 · 보복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 위기감 고조, 국정감사 등 국내 · 외 환경 변화로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물론 복수상표표시제도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논란 후 시행되었고, 국정감사나 석유수급 위기시 대책 등도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야 소나무의 푸른 지조가 그리워지고, 국가가 어려울수록 명재상이 생각난다는 옛말이 있듯이, 산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부의 현명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새삼 아쉬워진다.

비상시 가격관리정책은 정부의 정유사에 대한 시각의 일단을 보여줘

미국 테러사건과 이에 대한 보복전쟁으로 국제석유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 방안 중에는 일시적인 유가 인상분은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에특회계재원 등의 활용을 통해 석유제품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통제불능 원가요소에 대한 부담을 민간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정유사의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시각의 왜곡된 일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유가가 급등하거나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위기상황 발생시 원활한 원유확보 및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러한 외부요소를 정유사에게만 부담지우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복수상표표시제도는 의무가 아닌 사적계약에 의한 가능성으로 인식되어야

석유산업의 각 사업주체 및 정부 부처간의 오랜 논란 끝에 올해 9월부터 복수상표표시제도가 시행되었다.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복수상표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듯 복수상표표시 주유소의 등장이 저조하자 제도도입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

고, 일부 언론은 이러한 소비자의 성급한 기대에 편승해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책임 모두가 마치 정유사에 있는 것처럼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유사는 기존 주유소 고객의 지속적 확보 및 시장유지를 위해 보다 많은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고, 주유소는 이러한 공급자별 유인을 세밀히 검토하여 최선을 선택하는 당사자간 사적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왕에 도입된 복수상표표시제도가 무리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석유비축제도,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제도, 석유제품가격 및 원가, 등유이원화제도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대부분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지적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정부는 제도 본연의 취지와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업계의 특성과 타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석유정책 수립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석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산업간의 형평성이 고려되고,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함은 물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MIX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지금까지 이러한 기조가 석유산업 정책의 대원칙이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97년 석유산업 자유화 과정 이후 현안처리에 있어서 각종 NGO, 언론 등에서 여과없이 분출된 단편적 주장들이 석유업계 전문가의 식견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몇몇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간 정유업계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왔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석유산업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가적 역량이 국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유업이 단순히 규모가 크고 이익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폭리를 취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가는 듯한 일부 계층의 분위기가 정책에 여과없이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초우량기업이란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업이 활발한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업계 스스로도 이전투구식 경쟁을 지양하고 업계와 국가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소신있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더욱 강인한 경쟁력을 배양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국가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수용은 겸허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이로 인해 정책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어차피 경제주체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부의 단편적인 주장에 근거한 정책에 따른 혼선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떠안고 가야 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수립과정에 오랜기간 에너지업에 종사해 온 업계나 에너지전문 학자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거시적인 시각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본다.